

전 · 의경의 부조리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복무환경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Study on South Korea auxiliary policeman's corruption actual conditions
-Focused on their service environment-

김상균(Kim, Sang Gyun) · 송병호(Song, Byeong Ho)*

ABSTRACT

Korean auxiliary policeman's system to find the origin in the world as unique drawing that is difficult discussion of continuation or abolition continue.

If assert constitutionality by score, lift ILO standard and assert. This research takes into account actuality that achieve public peace assistance business more than establishment then main purpose, ago that suffer home affairs life physiognomy, business achievement physiognomy in organization for the auxiliary policeman. That is, problem is caused because done auxiliary policeman's human rights saliva actually independently of abrogation controversy of auxiliary policeman system.

As see in auxiliary policeman earnest prayer's beating and severity action, service secession by it and occurrence of suicide accident, internet dissemination of naked body picture, injury in various demonstration spots etc., auxiliary policeman's accident of service is happening lowdown considerable. Also, this accident can say that is number that is never less comparing in the accident occurrence rate that is happening in army.

Auxiliary policeman's service must cope in blizzard situation such as injection, night prevention of crimes round of inspection, situation waiting before various demonstration and assembly. Auxiliary policeman's situation is imminent compared to that the military is training situation without actual fighting stress etc.. are serious level accordingly with auxiliary policeman surgeon burdensome business who come from these situation.

Method of investigation used method by question. First, composition item of question made out referencing virtue research about connection literature and auxiliary policeman, preliminary interview investigation, virtue research material connected with human rights situation of the military.

First, question ago laying stress on following contents, lord relationship's human rights situation grasp. ①dissatisfaction cause ②auxiliary policeman's work relation ③auxiliary policeman's way ④earnest prayer of human rights and historical spot remanufacture experience ⑤beating·severity action damage of bottleneck action of etc. That is auxiliary policeman's complaint main point present are it.

Analyze problem laying stress on these problem and diagnose and proposed protection way.

Only, this research put emphasis to choose the auxiliary policemen which is being in service present to caravans and investigate actual conditions that is present overall measurement of a piece of lumber of human rights situation. Therefore, it can be indicated by limit of research that have possibility that insincerity of question response and problem of distortion are caused because sleep that targets are being in service.

Also, this research and investigation has limit of research that can not but depend on partial datas of unit which visit for question in spite of sense that investigate the auxiliary policeman which is being in service present.

* 백석대학교 교수

Key Words : 한국전의경제도(Korean auxiliary policeman's system), 부패(corruption),
구타행위(Beating), 가혹행위(Severity action), 복무환경(Service environment)

1. 서론

우리한국의 전투경찰제도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제도이다. 전투경찰대원은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여 평시 치안활동에 투입되고 있다.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하면 작전전투경찰순경(전경)의 주 임무는 대간첩작전이고 의무전투경찰순경(의경)은 치안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전·의경은 경찰인력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찰의 시위진압 등 치안업무수행에 중요한 자원으로 역할 수행하고 있다.

특히 시위진압과 방법순찰, 시설경비 등에 주로 동원되는 등 정규경찰관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역할은 전·의경이 대신하여 임무를 맡는 보조적 내지 주도적인 경찰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과중한 업무 탓(특히 시위진압에 많이 동원되는 관계로)에 지원에 의해 선발하는 의경의 지원율도 높지 않을 뿐 아니라¹⁾ 군 현역으로 입대한 자원에서 차출되는 전경은 훈련병들의 기피대상이기도 하다.

1970년 12월에 제정된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따라 도입된 전투경찰은 과거군사정권 하에서는 정권안보의 방패막이로 활용되었고, 국민적 지지 기반에 정통성을 갖추었다고 자부하는 국민의 정부 이후에도 여전히 전투경찰은 시위진압 등 시국치안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송기춘, 2005: 30-31)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에 있는 현시점에서 전투경찰제도의 폐지 내지 감축에 대한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일부 학자와 시민단체는 전투경찰은 당초의 입법 취지를 따르도록 운용방법을 대폭 개선하든지 아니면 폐지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최창동, 1998)

'전투경찰'은 '특수경찰'로서 '대간첩작전'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의무경찰'(의경)은 일반치안업무보조가 그 임무이다. 전투경찰은 현역군인으로 입대한 사병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요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여 파견함으로써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각급 경찰관서에 배치된 후 경찰지휘관의 지휘를 받는다. 따라서 이들은 군인 수준의 월급과 군복을 지급 받으며, 현역군인에 준하는 계급(특경, 수경, 상경, 일경, 이경)도 부여되어 현역군인과 유사한 병영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를 두고 군사와 치안의 영역이 구분되지 못하고 혼동상태에 있다는 주장도 있다.(이계수, 2003: 237)

또한 현재 운용되는 전투경찰제도는 입법취지와 실제운영상에 괴리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²⁾ 일부는 전투경찰제도는 대간첩작전을 명분으로 반정부 시위현장이나 노동자들의 쟁의현장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지 않고도 군인을 동원하려는 낡은 발상에

1) 2004년도 의경모집인원은 14,012명이고 응시인원은 15,345명으로 경쟁률은 1.09:1에 불과하였다.

2) 1991년 당시 전경이었던 박선진씨의 헌법소원제기를 계기로 전투경찰대설치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바 있다.

서 나온 편법이라는 주장도 제기한다.

또 일부에서는 우리한국의 시위문화와 시위건수를 볼 때 정규 경찰력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의경을 치안보조업무 뿐 아니라 시위진압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국방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투경찰제의 폐지는 곤란하다고 경찰당국은 주장한다. 또 현시점에서 경찰관으로 대체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투경찰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치안불안을 초래하는 등 시기상조이며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전·의경제도의 폐지논란과는 별개로 현실적으로 전·의경의 인권침해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의경 대원의 구타 및 가혹행위, 그로 인한 복무이탈과 자살사고의 발생, 알몸 사진의 인터넷유포, 각종 시위현장에서의 부상³⁾ 등에서 보듯이 전·의경의 복무 중 사고는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의경조직에서 발생하는 사고비율은 군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고발생율에 견주어 결코 적지 않는 숫자라고 할 수 있다.⁴⁾

여하 간에 전·의경의 복무는 각종 시위진압작전에서의 투입, 야간방범순찰, 상황대기 등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관계에서 오는 과중한 업무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 등은 더욱 심각한 수준임에 분명하며, 이러한 특수한 조직상황과 업무특성 등으로 전·의경은 구타·가혹행위 등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크고 이는 사람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살·복무이탈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는 의·식·주이다. 군인에 버금가는 병영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무생활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열악한 취침시설이나 편의시설의 부족, 근무관계, 보급품의 질저하, 급식비의 문제 등은 현직 경찰관의 복지수준에도 미흡할 뿐 아니라 현역군인과 비교해도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⁵⁾ 또한 출동 시 길거리에서 또

3) 한편 최근 5년간 전·의경의 사망과 부상 및 그 원인별 현황으로는 매년 평균 20명이 사망하며, 평균 1,702명이 부상을 당하는데, 시위진압도중 사망하는 경우는 전무하였으나 부상을 입는 경우는 평균 207명이었다. 이러한 근무상황과 업무 및 조직의 특성에 따라 전·의경은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어느 조직에서보다 높은 상황에 놓여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언급한 자살이나 복무이탈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정신과 치유를 받아야 상황까지 이른다. 전·의경의 정신과치료자 및 사유별 현황을 보면 2002년 113명, 2003년 148명, 2004년 6월까지 92명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또한 치료사유로 적응장애, 정신분열, 우울증, 기타 등이 있었다.

4) 최근 5년간 전·의경 자살, 자해, 구타 등 자체사고 현황의 경우 자살 39건, 자해 29건 구타 및 가혹행위 1963건, 탈영 등 복무이탈 1337건 등이다. 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5년간(1999-2003) 전·의경과 비슷한 연령대(20-24세)의 인구10만명당 자살자는 평균 11.4명이었다. 위의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전·의경의 경우는 평균 16명에 이른다. 또한 군대내 구타 및 가혹행위와 군무이탈 현황에 대한 국방부 국정감사자료와 비교할 때도 전·의경의 경우가 더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국방부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구타는 1996년 1,311건, 1997년 1,146건, 2000년 1,073건, 2001년 878건으로 매년 1,000여건의 구타사고가 발생한다고 한다. 군대와 전투경찰의 사고비율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전·의경의 수와 군인의 수를 비교할 때 전·의경의 사고발생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5) 2005. 10. 27일자 국방부보도자료에 의하면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의 이름으로 장병인권보호를 위하여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된다고 하며, 이를 위해 2006년도까지 3,220억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한다. 이에 비해 군병력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전의경에 대한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

는 버스 뒤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은 전·의경들에게는 매우 당혹스럽고 수치스럽게 하는 경우이다.

전·의경이 생활하는 장소는 유형별로 기존의 경찰서내의 경우와 독립 부대 건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의 건물은 10~15년의 건물이 많으며 신축한 경찰서의 건물은 그나마 형편이 양호하지만 근무위주로 건축되어 휴식, 취침 등 일상생활에서 오는 불편함은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전·의경은 엄밀히 따지면 군복무를 대신하여 복무를 하고 있는 조직이고, 군 조직과 유사한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 전의경은 군대와 마찬가지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또 다른 조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연구는 전·의경의 구타 및 가혹행위 등 기본적인 인권침해상황은 물론이고 내무생활, 근무관계, 복지 및 의료 등 전·의경의 복무환경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해서 다양한 문헌조사방법 이외에도 설문조사방법을 수행하였다. 조사 대상의 표본추출방법은 모집단을 2개 이상의 상호배타적인 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 내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은 층화표본추출방법을 원칙으로 하였다. 즉 전국의 전경대, 기동대, 방순대를 지역별로 층화하여 추출한 후 각 층에서 무작위로 표본추출하였다. 이때 각 층의 크기를 고려한 비례층화방법을 사용하였고, 통계분석 시 각 층의 크기에 비례하도록 설계하였다. 다만, 알몸신고식, 자살사고 등으로 문제점이 많은 부대로 알려진 소수의 부대(4개 부대)에 대해서는 이러한 표본추출방법을 배제하고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설문조사는 2005년 9월1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연구자가 직접방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연구결과와 전국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 14개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를 지역별·부대유형별로 구분하고 전·의경 대원수에 비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각 부대별 조사대상수는 계급별로 15명씩으로 하여 60명 내외로 정하였다. 하지만 실제 조사한 부대에서는 이경이나 수경 등 특정계급의 총원이 15명에서 부족한 부대들이 다수 발견되어 이러한 부대들에서는 인접계급의 대원들에게 설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예컨대 이경이 부족할 경우 일경진급이 얼마 안 된 일경으로 부족분을 채웠다. 다만 이경이 1명이거나 수경이 없는 부대들은 나머지 계급으로 60명 내외를 설문하였다.

부대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현 복무 부대원들의 응답의 충실성과 공정하고 객관적 응답을 구하기 위해 우선 계급별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기간요원이나 기타 선임대원의 접근을 차단하였다. 이러한 객관적 조치만으로도 이미 교육되었을 수 있는 가능성에서 오는 결과의 오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연구조사의 비밀성 및 조사대상부대에 대한 피해가 전무함을 설명하였고, 더 나아가 이번 조사는 소속부대는 물론 부대원 및 앞으로 전·의경이 될 후임들의 근무조건과 복지 및 편의시설 향상을

위해서는 진실된 답변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이 연구는 전국의 전·의경 부대 중 전경대 8곳, 기동대, 10곳, 방순대 8곳 등 총 26개의 부대에 대한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은 총 26개 부대에 1,540부를 설문하였고, 불성실한 답변이나 부대유형을 미기재한 설문지 196부를 제외한 총 1,344부(87.2%)를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2. 이론적 논의

1) 전·의경 제도의 개념과 구성

전경과 의경의 인권문제를 다루기 전에 전투경찰제도의 연혁과 도입배경을 검토해보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전투경찰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해방 후 4·3사건, 여순반란사건 등 좌우익의 대립상황에서이다. 1948년 10월 치안국에 비상경비총사령부가 설치되어 전국의 모든 전투경찰을 지휘하게 하였고, 1950년 한국 전쟁시에 태백산과 지리산에 은거하고 있던 적의 패잔병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1950년 12월에 태백산 지구경찰대, 지리산 지구경찰대가 편성되어 활동을 하였고, 1951년 1월 운문산지구 전투경찰사령부가 설치되었다.

한국전쟁시기에 군 병력만으로 전투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경찰의 임무가 일부 전투임무로 전환되었고, 그 결과 1950년 48,010명이던 경찰의 정원이 1951년에는 63,427명에 이르게 된다.⁶⁾ 정전이 가까워지면서 여러 행정구역이 접하는 지리산지구에서 경계의 불명확으로 인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한 작전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 지역을 총괄하는 서남지구전투경찰대가 1953년 5월에 창설되어 지리산주변지역에 대한 전투와 치안을 담당하게 되었다.

1953년 5월 14일 전투경찰의 기본 조직을 혁신하고 유기적인 부대 운용을 목적으로 ‘서남지구 전투 경찰대법’이 국회에서 제정되고, 동시에 서남지구 전투 경찰대 사령부가 남원에 설치되어 휴전까지 활동·존속되다가 1955년 7월에 해체된바 있다.(송기춘, 2005: 31) 이와 함께 같은 날 경찰직무옹원법 제4조에 의거 경찰기동대가 설치되어 공비토벌과 후방경비를 담당하게 되었다. 동법은 “돌발사태의 진압 또는 공공질서의 교란 또는 교란될 우려가 현저한 지역의 경비에 있어서 소관 경찰력으로써는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위법에 근거하여 1962년 11월 청와대 근처에서 경찰기동대 1개중대의 규모로 편성되었고, 1966년 7월부터는 대통령령 제2665호에 의거하여 전투경찰대가 경찰의 비정규전 작전대로 인정되어 운영되어 왔다.

이후 여러 차례의 간첩침투사건을 겪어면서 1970년 12월 31일 전투경찰대설치법이 제정되어 그 동안 일반경찰관으로 구성된 전투경찰이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병력자원으

6) 이후 감소하여 1960년에는 33,035명, 1961년에는 29,835명으로 줄어들었다.

로 전환되어 군대식의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⁷⁾.

전투경찰대의 도입배경을 전경과 의경으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3 규정에 의하면 전투경찰은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는 전투경찰(전경)과 치안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전투경찰(의경)로 구성된다.

작전전경 제도의 근거법률은 전투경찰대설치법 및 동시행령으로서 도입배경의 경우 당시 국회의회의록을 보면⁸⁾ 대간첩작전 등을 위해 전투요원 확보, 전투능력의 향상, 조직적인 경찰력의 필요 및 전사상자에 대한 급여금 지급 근거마련 등을 위해 근거법률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주요임무는 대간첩작전(대비정규전, 국가중요시설방호, 요인 및 신변보호, 작전상 취약요소제거 및 경비임수수행)이며, 1976년 9월1일 창설하였다.

의무경찰 제도의 근거법률은 전투경찰대설치법 및 동시행령으로서 도입배경은 경찰조직의 이원화, 우수한 인적 자원 확보 가능, 부조리 유흥 근절, 경찰에 대한 사회의 친밀감 조성, 국가 재정상 치안수요증가에 따른 직업경찰의 증원곤란 및 경찰 내륙지 작전수행에 따른 전력증강 등의 이유로 의무경찰모집을 위한 근거법률이 필요하여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⁹⁾ 주요임무는 시위진압, 범죄예방순찰, 교통, 유치장근무 등 치안보조업무수행이며, 1982년 12월 31일 창설하였다.

2) 관련선행연구

현재 전·의경은 전체경찰인력의 약35%를 차지하고 정식경찰관의 임무를 대행내지 보조하는 등 경찰조직에서 중추적 기능을 맡고 있지만,¹⁰⁾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술적 연구로는 전·의경의 사기증진방안에 관한 연구,¹¹⁾ 전경의 사기 및 의식에 대한 실증적 연구¹²⁾, 전국의 전·의경을 대상으로 하는 전·의경 사기에 관한 실증적 연구¹³⁾ 등 전·의경의 의식조사 및 전·의경 조직의 관리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한편 군입대자를 전경으로 전임하여 치안보조업무를 시킬 수 있는가하는 전·의경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일부 존재하고 있다. 송기춘은 국방의 의무를 광의로 해석하여 전투경찰순경에 의한 대간첩작전수행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안이한 시각임을 지적한다.(송기춘, 2005) 그 이유로는 현재의 남북화해분위

7) 남한사회의 법현실과 이데올로기 비판, 민주법학 창간호, 1989, p.38.

8) 제75회 국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2호

9) 제114회 제10차 국회본회의 (1982년10월12~13일) 회의자료

10) 경찰의 인력구성(경찰청, 경찰백서(2004)참고)을 보면 전체 146,705명중에 경찰관은 92,165명, 전의경은 50,609명으로 전의경이 차지하는 비율은 34.5%를 차지하였다.

11) 신성원, “전·의경 사기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전·의경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제33호, 2004, pp. 195-227.

12) 박광치, “전경의 사기 및 의식에 대한 실증적 연구: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전경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13) 이철구, “전·의경 사기에 관한 실증적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기와 같은 상황에서 대간첩작전을 수행해야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군부대의 병력수준과 작전능력을 감안한다면 현재와 같은 대간첩작전을 위한 경찰조직은 별도로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경찰조직에서도 작전전투경찰 대부분이 대간첩작전보다는 집회·시위의 진압, 방범순찰과 같은 치안보조업무를 주로 하는 것만 보아도 대간첩작전임무는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경에게 치안보조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에 대한 위헌논란에서 재판관 5인의 의견은 전경은 대간첩작전 수행뿐만 아니라 집회·시위의 진압 등을 통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경찰본래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재판관 4인의 소수의견은 전경으로 전임되는 현역병은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할 뿐이고, 경찰의 순수한 치안업무인 집회 및 시위의 진압임무는 결코 국방의 의무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다.

송기춘도 이러한 소수의견에 따라 아무리 국방의 개념을 넓게 해석한다 해도 일반적인 치안유지업무가 국방의 개념에 포섭될 수 없다고 한다. 한편 같은 취지의 이계수도 “대간첩작전과 같은 대외적 안전과 관련된 임무수행부대를 아무런 제한장치 없이 대내적 안전과 관련된 임무에 투입해도 좋다고 믿고, 또한 그런 방향으로 법률을 해석·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군과 경찰의 조직 및 임무의 구분이라는 헌법상의 국가구성원리는 무의미하게 된다고 하면서, ‘대간첩작전시’에만 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병력을 모든 일상적인 시위현장에 투입시키는 관행과 그러한 관행을 현행법에 의해 정당화하는 해석은 헌법위반이다.”라고 주장한다.(이계수, 2003)

즉 전·의경의 과격시위에 대한 진압활동은 가장 격렬한 형태의 범죄대응이며 이는 전·의경조직의 설립취지인 치안보조적 기능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러한 시각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형태의 전·의경제도를 전면 부정하는 형태로 전·의경제도의 향후 전개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 되어야 대상으로 보인다.

한편 전·의경에 대한 논의들은 “전·의경 경찰봉이 서럽다: 밤낮 없는 근무에 청춘시드는 최전선의 공권력... 깐깐한 군기, 잡다한 임무 등에 자살, 탈영 잇따라”¹⁴⁾, “이리 채이고 저리 맞고, 전투경찰은 괴로워 : 시위출동 등 격무에 구타사고도 잇달아..., 의경제도 폐지검토필요”¹⁵⁾, “혈값에 경찰머슴살이, 할일 없는 전경, 시위진압 중”¹⁶⁾ 등 신문이나 잡지 등 보도가 각종 사건사고발생시 일회성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시민의신문사와 인권실천시민연대가 주관한 경찰개혁 연속 정책토론회의 제4차 주제로 “전·의경의 역할과 인권”이 선정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의경의 인권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과제로 선정하면서, 전·의경의 인권문제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부각될 전망이다.

한편 경찰당국은 구타/가혹행위, 복무이탈, 자살/의문사 등 각종 전·의경사건·사고

14) 정인환, “전·의경 경찰봉이 서럽다: 밤낮 없는 근무에 청춘시드는 최전선의 공권력... 깐깐한 군기, 잡다한 임무 등에 자살, 탈영 잇따라”, 한겨레 21, 통권 437호, 2002, pp. 54-56.

15) 나권일, “이리 채이고 저리 맞고, 전투경찰은 괴로워 : 시위출동 등 격무에 구타사고도 잇달아..., 의경제도 폐지검토필요”, 시사저널 548호, 2000, pp. 54-55.

16) 강국진, 「시민의 신문」, 2005.9.5, pp. 6-7.

로 경찰에 대한 여론악화는 물론 업무수행 상 차질을 가져오는 등 심각성을 인식하고서 “전경사고예방” 및 “전·의경관리요령”에 관한 지침들을 만들어 일선부대에 하달하고 있다. “전경사고예방”이라는 지침서는 전·의경의 자살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살자의 특성, 자살에 대한 일반이론은 물론 자살예방기법을 소개하고 사후예방에 중점을 두고 사고발생시의 조치사항 등을 중점 소개 하고 있다.(경찰청, 1999)

또한 “전·의경관리요령”지침은 전·의경조직의 개혁추진과제로 사기진작방안, 가울 교육제도의 개선, 한마음체육대회 활성화방안, 사고예방강화대책 등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구타·가혹행위 처리지침과 근절대책을 제시하고 순직·공상 등 전·의경 보상 업무, 의료업무, 인사업무 등의 처리요령과 그 개선방안 등을 소개하고 있는 정도이다. (경찰청, 2000)

군인의 인권상황과 관련된 선행연구에는 우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구된 “군대 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가 대표적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02) 군대의 인권관련 연구는 구타 및 가혹행위를 포함한 폭행사고의 실태 및 그 원인분석과 예방대책¹⁷⁾, 자살사고의 실태 및 그 원인분석과 예방대책¹⁸⁾은 물론 사병의 사기증진 및 이를 위한 민주적 조직관리방안에 관한 연구들이 어느 정도 축적된 상태다.¹⁹⁾

한편, 전·의경 조직에서 발생하는 구타/가혹행위 및 자살/의문사 등 각종 인권침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그 발생원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폭력이나 공격행위에 대한 생물학적 이론들은 대개 폭력을 본능적인 행위로 보거나 유전적인 요인이나 호르몬의 영향, 신체적 특징 혹은 신경 메커니즘의 문제나 내적인 욕구가 분출한 것으로 파악한다.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개인의 성격 등 ‘심리적 비정상성’이 폭력이나 공격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한편 어떤 조직사회의 환경과 문화가 폭력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²⁰⁾ 폭력하위문화이론에 의하면 자극에 대한 반응양식으로서 폭력이 불법적이거나 죄의식을 느낄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사회구성원들은 생각한다는 것이다. 폭력행위에 대한 사회학적 이론들은 폭력이 유발되는 사

17) 군대내의 폭행사고와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계수(2003), “군대내 구타·가혹행위 및 그로인한 사고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에 관한 연구”, 정의광(2001), “군 폭행사고의 심리적·사회적 원인분석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오윤성(1996), “군부대내의 폭행에 관한 피해자학적 연구: 상호작용적 관점을 중심으로”, 정진호(1995), “군 폭행사고의 실태와 예방대책 연구” 등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18) 군대내의 자살사고와 관련된 연구에는 다음과 같다. 이창훈(2004), “군 내 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홍홍표(2004), “군인 자살사고의 실태분석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박순천, 박순화, 나정순(2004), “군내 자살예방대책 효과분석: 비전캠프를 중심으로” 등 다수의 논문이 발표된바 있다.

19) 사병의 사기증진 등 조직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에는 김상균(2001), 병영스트레스가 군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성열(1997), “신세대 장병을 대상으로 한 바람직한 군대문화의 발전방향” 등의 다수 논문이 있다.

20) 폭력문화에 대한 설명의 대표적인 이론은 폭력하위문화이론으로 볼 수 있다. 한 예로, Wolfgang과 Ferracuti는 미국 남부의 폭력범죄에 대한 설명으로서 폭력을 용인하는 문화적 특성에 주의를 기울였다. 폭력하위문화이론에서 폭력은 문화적 환경 속에서 학습되고 공유되는 행위양식으로 파악하였다.

회환경적 요인들에 관심을 가진다. 또한 사회학적 이론을 기초로 하여 그 범위를 확장한 상호작용이론은 조직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의 과정 속에서 폭력이 야기된다는 것이다²¹⁾.

실제 병사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문만재는 구타 등 폭력행위 발생요인으로 “폭행을 촉발시키는 요인, 습관성의 정도, 억제요인, 상황적 요인, 반응 잠재력이라는 5개 요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문만재, 1996) 고기환은 폭행의 원인을 사소한 시비, 사적 제재, 음주행패, 개인감정, 고참병 횡포, 상급자 구타, 기타로 구분하는 육군본부의 분석을 바탕으로 “폭행사건의 원인의 대부분이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못한데서 오는 갈등”에 있다고 설명한다.(고기환, 1994)

한편 군내에서 발생하는 자살은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지만 크게 개인적·심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적·심리적 요인으로서는 전·의경 개인의 인내력과 자제력 부족, 권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부대생활 조건에 대한 불만족에 따른 정신적 나약함, 사회와의 단절에 따른 피해의식 등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환경적 요인으로서는 통제된 생활, 부대내 의사소통의 장애, 부대관리자들의 불충분한 관리, 불합리한 조직 내의 제도나 관행의 미개선 등을 들 수 있다.

경찰청은 전·의경의 유서로 자살원인을 분석하였는데 자살자의 대부분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인지협착을 경험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자살원인으로 좌절된 사랑, 수치심과 불명예심, 증오와 복수심, 자학과 무가치함에 대한 반성, 불안과 두려움 등을 들고 있다.(경찰청, 2000)

한편, 김경래(1989)는 의식의 문제를 통해 군대에서 발생하는 각종사고를 설명한다. 즉 개인의 내적인 세계에서 경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심리현상인 의식성향이 사고자와 비사고자 간에는 다르다고 하였고, 여명호(1995)는 군 조직의 특수성과 신세대의 의식성향 사이의 불일치가 자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한편 김상균(2001)은 병사들의 복무중에 겪게 되는 스트레스가 탈영과 폭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전·의경의 복무환경을 조사한 연구가 전무하여 이 분야의 많은 후행연구들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3. 전·의경의 복무환경 실태조사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1) 즉 ① 갈등이나 이해관계가 얽힌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가치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행위가 유발된다. ② 폭력행위를 유발시키는 상황적·상호관계적 요소, 즉 행위유발을 하게하는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③ 폭력행위결정에 있어 행위자의 의식이나 자각이 중요하다. 즉 상호작용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세요소가 폭력행위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표3-1> 인구통계학적 자료

구 분		빈도(명)	비율(%)	구 분		빈도(명)	비율(%)
계급 N=1,322	이경	314	23.8	학력 N=1,316	고 졸	67	5.1
	일경	273	20.6		대 재	1,217	91.6
	상경	426	32.3		대 졸	29	2.2
	수경	309	23.4		대학원이상	3	0.2
부대 유형 N=1,317	전투경찰대	328	24.9	종교 N=1,328	기독교	344	25.9
	경찰기동대	565	42.9		천주교	168	12.7
	방법순찰대	424	32.19		불 교	328	24.7
					기 타	254	19.2
				연령 N=1,299	무 교	234	17.6
					21세이하	833	64
					22세이상	467	36

설문조사에 이용된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중에서 중요한 변수로 활용될 계급별 분포와 부대유형별 분포, 학력, 종교, 연령별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계급은 전·의경의 계급이 4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입대 후 7개월 미만인 이경은 314명으로 전체 조사대상자 중에서 23.8%를 차지하였고, 일경은 273명으로 전체 20.6%, 상경은 426명으로 전체 32.3%이고, 수경은 309명으로 전체 23.4%를 차지하였다.

둘째, 부대유형별로 보면 전투경찰대에 소속된 조사대상자는 328명으로 24.9%를 차지하였고, 경찰기동대는 565명으로 42.9%, 방법순찰대는 424명으로 전체 32.2%로서 전체 전·의경의 분포를 고려해 볼 때 통계활용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음은 학력별 분포는 고졸이하가 5.1%, 대학재학은 전체의 92.5%, 대졸이상은 1.4%이었으며, 종교별 분포는 기독교와 불교가 각각 25.9%, 24.7%, 천주교 12.7%, 무교가 17.5%이었다. 연령은 21세 이하가 64%, 22세 이상은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근무관계

(1) 평균근무시간

아래의 표는 전의경의 하루평균 근무시간에 대한 조사이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루평균 7-8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 1,108명 중 50.3%인 557명이지만 11-12시간을 근무한다는 응답도 24.9% 276명이었고, 심지어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대원도 1.1%인 15명이나 되었다. 즉 9시간 이상 과다 근무하는 대원들이 조사대원 1108명 중 35% 38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2> 평균근무시간

	6시간 이하	7-8시간	9-10시간	11-12시간	13-14시간	15시간이상	합계
빈도	163	557	60	276	37	15	1,108
비율	14.7	50.3	5.4	24.9	3.3	1.4	100.0

계급별 근무시간을 보면 이경, 일경, 상경의 경우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대원이 각각 5명, 4명, 6명으로 전체 15명 중 각각 33.3%, 26.7%, 40.0%를 차지하였다 반면 수경은 15시간 이상근무자가 1명도 존재하지 않았다.

한편 부대별 근무자들의 평균근무시간을 보면 11시간 이상 과다 근무하는 대원들이 전경대 89명, 기동대 167명, 방순대 71명으로 각각 15.5%, 20.0%, 7.1% 였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당 40시간, 1일당 8시간 초과근무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4시간 당 30분 이상, 8시간 당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전·의경을 국방의 의무를 지는 의무복무자로 여긴다고 해도, 야간 불침번을 제외하면 공휴일과 1일 8시간복무가 보장되는 군인보다도 열악한 근무여건에 놓여있다. 그리고 신입대원일수록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선임대원에 의한 근무전가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2) 휴게시간

아래의 표는 전의경의 하루 중 평균 휴게/자유시간을 조사한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루 평균 휴게 시간이 ‘전혀없다’가 1.6%(21명), 1시간 미만인 경우가 11.8%(151명)이고 1-2시간인 경우가 28.4%(364명)으로 총 응답자 1,282명 중에 41.8%인 536명이 ‘2시간 미만’의 휴게/자유시간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3-3> 평균휴게시간

	전혀없다	1시간 미만	1-2시간	3-4시간	5시간 이상	합계
빈도	21	151	364	441	305	1282
비율	1.6	11.8	28.4	34.3	23.8	100.0

계급별 휴게시간을 보면 전혀 없다는 응답이 이경 3.8%(11명), 일경 0.7%(2명), 상경 1.5%(6명), 수경 0.3%(1명), 1시간 미만이라는 경우는 이경 10.8%(31명), 일경 16.6%(45명), 상경 12.6%(52명), 수경 6.3%(19명)이며, 1-2시간이라는 응답은 이경 31.1%(89명), 일경 32.1%(87명), 상경 30.3%(125명), 수경 20.3%(19명)이었다. 이 조사결과 이경은 ‘전혀없다’에서 일경은 ‘1시간미만’이라는 응답에서 평균적인 응답보다 많은 응답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근무시간의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이경이나 일경 등 신입대원들이 상경이나 수경 등 선임대원들의 근무를 대신하거나 업무외적 사역 등에 많이 동원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대별 휴게시간에 대한 응답을 보면, 전혀없다는 응답은 전경대 0%(0명), 기동대 2.8%(16명), 방순대 1.0%(4명),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은 전경대 11.2%(34명), 기동대 15.6%(90명), 방순대 6.4%(25명), 1-2시간이라는 응답은 전경대 30.0%(91명) 기동대 30.8%(178명), 방순대 23.7%(93명)이었다.

기동대의 경우 휴게시간이 전혀 없거나 1시간미만인 경우가 다른 부대보다 많아 휴게부족이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전경대는 휴게시간이 1-2시간이라는 응답이 다른 부대보다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대간의 주요업무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방순대의 경우 주요업무가 방범경찰임에 반하여 기동대와 전경대는 경비경찰이다. 방범경찰은 주로 범죄예방에 초점이 있고 현재 경찰서나 지구대가 3교대근무제로 운용되기 때문에 근무 및 휴게시간이 비교적 고정적이다. 반면 경비경찰은 집회/시위 등 사건발생이 예측할 수 없어 항상 대기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지역경찰의 요청 시에 야간방범순찰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방순대도 경비경찰에 동원되기도 하므로 부대간의 업무가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휴식보장은 업무에 따른 차이보다는 각 부대를 운영하는 관리자 및 경찰당국의 의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대원들의 휴식을 보장하고도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효율적인 부대 관리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

(3) 수면시간

아래의 표는 전의경의 하루 평균수면시간을 조사한 내용이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루 평균 7-8시간이라는 응답이 33.3%(417명)이었고, 9시간 이상 수면시간을 갖는 경우도 5.7%(72명)나 되었지만, 수면시간이 5시간미만이라는 응답도 6.3%(79명)이고 5-7시간의 수면시간을 갖는 경우가 조사대상 1254명 중 54.7%(686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전·의경의 수면시간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표3-4> 수면시간

	5시간미만	5-7시간	7-9시간	9시간이상	합계
빈도	79	686	417	72	1254
비율	6.3	54.7	33.3	5.7	100.0

계급별 수면시간을 보면 5시간미만이 이경 8.5%(23명), 일경 4.4%(12명), 상경 8.2%(33명), 수경 2.7%(8명), 5-7시간미만이 이경 54.8%(148명), 일경 53.3%(145명), 상경 58.0%(233명), 수경 52.7%(157명)이었다. 조사결과 이경과 상경은 5시간미만의 수면시간을 갖는 경우가 전체평균 보다 높았으며, 수경은 전체 평균보다 매우 낮았다. 또한 상경은 5-7시간미만의 수면을 갖는 경우에서도 전체평균보다 3.0% 정도 높아 수면부족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경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면시간을 갖는 이유는 대원 중 최고계급인 수경이 내부반 업무수행 등에서 열외로 인정받는 대신 상경이 책임져야 할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경은 이경 등 후임대원의 부대적응력을 키워줘야 할 뿐만 아니라 수경 등 선임대원들도 챙겨야 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소위 ‘신경써야할 일’들이 그만큼 많아 수면시간이 준 것으로 보인다.

부대별 휴게시간에 대한 응답을 보면, 5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은 전경대 4.3%(13명), 기동대 7.0%(38명), 방순대 6.6%(26명), 5-7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은 전경대 54.1%(165명), 기동대 57.0%(311명), 방순대 52.9%(209명), 7-9시간이라는 응답은 전경대 38.4%(117명) 기동대 31.1%(170명), 방순대 32.2%(127명), 9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은 전경대 3.3%(10명), 기동대 4.9%(28명), 방순대 8.4%(33명)이었다. 조사결과 기동대는 7시간 미만의 수면시간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은 응답을 보였고, 방순대는 9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에서 전체평균보다 3.2%정도 높은 응답을 보였다.

부대별 수면시간에 관해서는 위의 휴게시간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방법경찰과 경비경찰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로 보이지만, 관리자나 경찰당국의 의지 및 효율적인 부대관리방안 또한 긴요함을 알 수 있다.

(4) 수면시간 과 휴게시간의 만족정도

아래의 표는 전·의경의 휴게시간이나 수면시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자료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면 및 휴게시간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매우 불만이다’, ‘불만이다’, ‘그저 그렇다’가 각각 62명(4.7%), 143명(10.9%), 356명(27.2%)으로 총 561명(43%)이 만족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5> 수면시간과 휴게시간의 만족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빈도	62	143	356	454	292	1307
비율	4.7	10.9	27.2	34.7	22.3	100.0

계급별 만족정도를 파악하면, 수경은 매우 만족한다 25.2%(67명), 만족한다 39.9%(120명), 그저그렇다 26.6%(80명), 전혀그렇지 않다 1.7%(5명)이었으며, 상경은 매우 만족한다 18.3%(77명), 만족한다 31.9%(134명), 그저그렇다 28.6%(120명), 전혀그렇지 않다 6.0%(25명)이었다. 또한 일경은 매우 만족한다 23.4%(64명), 만족한다 31.4%(86명), 그저그렇다 30.7%(84명), 전혀그렇지 않다 8.8%(24명)이고, 이경은 매우 만족한다 19.9%(58명), 만족한다 37.5%(109명), 그저그렇다 24.4%(32명), 전혀그렇지 않다 6.5%(19명)였다.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상경집단에서 매우 불만족하다와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전체 평균에 비해 많았다. 상경집단에서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많은 것은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위로는 수경에 대한 배려와 아래로는 이경 등 신입대원의 적응력

항상 등 ‘신경써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대별로 보면 매우만족한다가 전경대 21.5%, 기동대 22.2%, 방순대 18.8% 였고, 만족한다가 전경대 39.2%, 기동대 33.1%, 방순대 33.8%였으며, 그저 그렇다는 의견이 전경대 25.4%, 기동대 26.3%, 방순대 30.7%, 불만이라는 의견이 전경대 10.0%, 기동대 11.2%, 방순대 11.9%, 매우 불만이라는 의견이 전경대 3.5%, 기동대 6.6%, 방순대 3.0% 였다. 분석결과 기동대의 경우 매우 불만이라는 응답이 전경대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각각 전체평균보다 높았다.

기동대가 상대적으로 많이 불만족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은 위에서 언급한 수면과 휴게시간 실태분석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전경대가 높은 이유는 설명되지 않는다. 다만 전경대는 방법경찰활동에 동원되는 경우가 기동대보다는 상대적으로 적다면 이러한 결과도 가능하다고 본다.

(5) 평균 야간근무 회수

아래의 표는 전의경의 한달 평균 야간근무회수를 조사한 내용이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달 평균 3-6회라는 응답이 전체 조사대원 1274명 중 29.7%(378명)이었고, 3회 미만인 경우도 16.8%(214명)나 되었지만, 7-10회가 29.7%(255명)이고, 11-14회가 12.0%(153명)이었으며, 2일에 1일 꼴로 야간 근무를 하는 15회 이상도 21.5% 274명이나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언급하였듯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주 40시간근무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의 통상임금 50%가산지급 등의 규정이 지켜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3-6> 한 달 평균 야간근무 회수

	3회 미만	3-6회	7-10회	11-14회	15회 이상	합계
빈도	214	378	255	153	274	1274
비율	16.8	29.7	20.0	12.0	21.5	100.0

계급별 야간근무회수를 보면 한달 15회 이상 야간근무한다는 응답은 총 273명 중 이경 26명(9.5%), 일경 52명(19.0%), 상경 118명 43.2%, 수경 77명 28.2% 였으며, 한달 평균 11-14회 야간근무한다는 응답은 총 137명 중 이경 16명 11.7%, 일경 32명 12.0%, 상경 57명 41.6%, 수경 32명 23.4%였다.

상경과 수경계급에서 야간근무회수가 2일에 하루 혹은 3일에 하루 꼴로 빈번하였다. 야간근무가 계급별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한편 부대별 야간근무회수가 계급별로 차이가 나는 실태는 수긍하기 어렵다. 다만 상경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대 내에서 많은 업무를 맡는 현실이 반영된다면 다른 계급보다 많이 야간근무를 한다고 생각할 수 도 있다. 그런데 수경의 반응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하지만 수경계급이 부대의 야간근무 현실을 보다 진솔 하게 응답해 주었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결과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한편 부대별 야간근무회수를 보면, 15회 이상이라는 응답은 전체 273명 중 전경대근무자 51명 18.7%, 기동대 근무자 70명 25.6%, 방순대 근무자 152명 55.7%였으며, 11-14회 출동하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 139명 중 전경대 근무자 42명 30.2%, 기동대 근무자 27.3%, 방순대근무자 42.4% 였다. 이는 방순대의 업무가 주로 방법순찰활동이고 방법순찰은 주·야간 구분이 없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 진다.

(7) 부상경험

아래의 표는 올해 집회/시위 등 경비를 위한 출동에서 부상을 당한 경험을 조사한 내용이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없다는 응답이 전체 1,293명 중 1,036명으로 80.1%이지만 1회 당했다는 응답이 13.1% 169명이고 2-3회가 5.3%이며, 4-5회가 0.9%이었으며 심지어 6회 이상 부상당했다는 응답도 8명이나 되었다.

2005년 경찰통계연보에 의하면, 2004년의 총 시위회수는 11,338건이고 시위인원 3,034,660명, 연동원경찰 3,965,760명에 월평균 출동회수는 945회이며, 동원된 부대는 19,251중대라고 한다. 출동에 따른 부상자 현황을 보면, 2003년 240명, 2004년 6월말 까지 63명이 공상처리되었다. 이는 각각 전체 공상자의 23.8%와 13.3%로 이 조사결과와 유사하며 적지 않은 전·의경이 집회/시위 등 경비를 위한 출동에서 부상함을 알 수 있다.

<표3-7> 부상경험

	없다	1회	2-3회	4-5회	6회 이상	합계
빈도	1036	169	69	11	8	1277
비율	80.1	13.1	5.3	0.9	0.6	100.0

계급별 부상경험을 보면 한 달 평균 6회 이상이라는 응답은 총 8명 중 이경 4명, 일경 0명, 상경 3명, 수경 1명이었으며, 4-5회라는 응답은 총 10명 중 이경 2명 일경 2명 상경 2명 수경 4명이었고, 2-3회라는 응답도 총 69명 중 이경 3명, 일경 13명, 상경 30명 수경 23명이었다. 계급별 부상자 현황에서 이경 등 신입대원이 부상을 당하는 경우는 진압 등 경비업무에 익숙하지 못하거나 시위현장에서 일선을 지키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수경 등 고참대원은 교육훈련의 열외나 시위일선은 벗어나겠다는 정신자세의 해이 등이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부대별 부상경험을 보면, 6회 부상을 당한 경우는 전체 7명 중 모두가 기동대 근무자였고, 4-5회 부상한 경우는 전체 10명 중 전경대근무자 2명 기동대 근무자 6명 방순대 근무자 2명이었고 2-3회 부상당한 경우는 전체 69명 중 전경대 근무자 15명 21.7%, 기동대 근무자 35명 50.7%, 방순대근무자 19명 27.5% 였다. 즉 기동대근무자들이 출동 중 부상당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방순대에서 적은 부상을 당하는 것

은 위에서도 언급한 업무의 특성 상 당연하다. 하지만 같은 경비경찰업무를 지는 전경대가 기동대보다 부상자가 적은 이유는 전경대가 부상방지를 위한 방어훈련을 강화하였거나 출동회수가 적었기 때문인 둘 중 하나라고 보여 진다. 생각컨대 전경대라고 해서 출동수를 줄여준다고 보기 어렵다면 전경대는 그만큼 대원들의 부상방지를 위한 부대차원의 노력들이 많았다고 볼 것이다.

(8) 부상 후 치료 또는 휴식 보장

아래의 표는 전·의경의 집회나 시위 등 경비를 위한 출동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 소속부대에서 충분한 치료나 휴식이 보장되는지를 조사한 자료이다.

<표3-8> 부상 후 치료나 휴식 보장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보장되지 않는다 편이다	그저 그렇다	잘 보장 된다	매우 잘 보장 된다	합계
빈도	14	35	148	539	349	1085
비율	1.3	3.2	13.6	49.7	32.2	100.0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상 후 치료나 휴식 보장이 잘되거나 매우 잘된다는 경우는 각각 49.7%와 32.2%지만, ‘그저그렇다’나 ‘보장되지않는다’는 응답이 13.6%(148명)과 3.2%(35명)이었고, 심지어 ‘전혀보장되지않는다’는 경우가 14명(1.3%)이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전·의경은 시위·집회 등 경비활동으로 인해 부상자가 많이 발생한다. 2005년 7월을 기준으로 전·의경 경찰병원 치료 현황을 보면 외래환자의 경우 정원의 4.2배, 입원은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경찰청, 2005: 361) 일반 개인 병원이나 중대별 민간 지정 병원을 이용한 부상자를 포함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전·의경 부상자중 7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대원의 경우 경찰병원에서의 치료를 권장하고 있지만, 이는 서울과 근거리 지역에서만 가능하며, 경상도, 전라도 등의 원거리 지역의 경우 현실적으로 거의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의경 부대내에 ‘공중보건의²²⁾를 의무관으로 운용할 수 있다²³⁾’라는 규정이 있으나, 실제로 운용하는 경우는 없다.²⁴⁾ 그리고 ‘가벼운 부상이나 질환을 자대에서 치료할 수 있는 의무실을 설치

22) 공중보건의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한테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를 말하는데, 현재는 전국의 모든 군보건소, 읍·면 보건지소뿐 아니라 산간벽지·오지, 낙도 특수지, 의료기관 단체, 의료원, 민간병원 등지에서 지역사회의 1차 보건 의료 및 예방보건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23)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제170조 본문

24)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의 경우 농어촌등 보건의료취약 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전·의경 부대에서 의무관으로 운용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법률 개정을 통해 군의관 파견근무 내지, 자체 선발하여 군 대체복무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운영하여야 한다²⁵⁾’라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 운영하는 경우는 없다. 결국 부상의 위험성이 높은 시위현장에 의료진이 배치되거나 사후 부상자치료를 위한 의료 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계급별로 분석해 보면 ‘전혀보장이안된다’는 응답을 한 경우 전체 14명 중 이경 5명, 일경 0명, 상경 4명, 수경 5명이었고, ‘보장되지않는편’이라는 경우는 전체 33명 중 이경 11명(33.3%), 일경 5명(15.2%), 상경 14명(42.2%), 수경 3명(9.1%)였다. 또한 ‘그저그렇다’는 긍정적이지 않은 응답의 경우도 전체 146명 중 이경 19명(13.0%), 일경 32명(21.9%), 상경 56명(38.4%), 수경 39명(26.7%)이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상경과 이경집단에서 부상 후 치료나 휴식보장이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대유형별로 분석하면, ‘전혀보장되지않는다’는 응답을 한 경우는 전체 13명에서 전경대근무자 2명(15.4%), 기동대근무자 8명(61.5%), 방순대근무자 3명(23.1%)이었으며, ‘보장되지않는다’는 경우는 전체 34명 중 전경대근무자 6명(17.6%), 기동대근무자 23명(67.6%), 방순대근무자 5명(14.7%)였다. 또한 ‘그저그렇다’는 긍정적이지 않은 응답의 경우도 전체 148명 중 전경대근무자 31명(20.9%), 기동대근무자 74명(50.0%), 방순대근무자 43명(29.1%)이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기동대근무자들에서 부상 후 치료나 휴식보장이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을 크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구타 및 가혹행위

(1) 구타와 가혹행위 당한 경험

아래의 표는 부대 생활 중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한 경험을 조사한 자료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타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59명이었고 이는 조사대원의 12.4%에 해당하였다.

<표3-9> 구타와 가혹행위 당한 경험

	구타			가혹행위		
	있다	없다	합계	있다	없다	합계
빈도	160	1128	1288	155	1090	1245
비율	12.4	87.6	100.0	12.4	87.6	100.0

계급별로 보면 이경 13.8%(22명), 일경 13.8%(22명), 상경 43.4%(69명), 수경 28.9%(46명)이었다. 또한 구타당한 경험을 부대유형별로 보면 총 159명 중 전경대근무자가 19.5%(31명), 기동대근무자가 52.8%(84명), 방순대근무자가 27.7%(44명)였다. 또한 가혹행위를 당한 경우는 155명이었고 이는 조사대원의 12.4%에 해당하였다. 계급별로

25)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제168조 본문

보면 이경 17.5%(27명), 일경 21.4%(33명), 상경 35.7%(56명), 수경 25.3%(39명)이었다. 또한 가혹행위를 당한 경험을 부대유형별로 보면 총 154명 중 전경대 근무자가 20.1%(31명), 기동대근무자가 58.4%(90명), 방순대근무자가 21.4%(33명)였다. 상경 계급에서 구타·가혹 행위를 당한 경우가 많았는데, 상경이 가장 많은 업무를 하고 있으며 후임병들인 이경과 일경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부대 특성상 기동대는 전경대와 방순대 보다 독립된 부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있기 때문이며, 시위·집회 현장에서 진압이라는 업무를 병자하여 암암리에 구타와 가혹행위가 행해지고 있으며 출동 현장에서는 구타가 허용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대 차원에서 구타·가혹 행위자에 대한 미온적 처리도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2) 구타 당한 회수

아래의 표는 구타행위를 당한 회수를 조사한 내용이다.

아래의 표를 보면 거의 매일 혹은 적어도 1주일에 1회는 구타를 당하는 경우가 5.6%(66명)였다. 또한 2-3주에 1회구타 당한다가 1.9%(22명), 1개월에 1회가 1.1%(13명) 2-3개월에 1회가 1.8%(21명), 4개월 이상에 1회가 4.0%(47명)였다.

<표3-10> 구타 당한 회수

	전혀 없다	거의 매일	1주에 1회	2-3주에 1회	1개월에 1회	2-3개월 에 1회	4개월 이상에 1회	합계
빈도	1013	37	29	22	13	21	47	1182
비율	85.7	3.1	2.5	1.9	1.1	1.8	4.0	100.0

계급별로 보면 거의 매일 혹은 1주에 1회 구타당한다는 경우가 총 66명인데, 이 가운데 이경 25.7%(17명), 일경 15.1%(10명), 상경 37.8%(25명), 수경 21.2%(14명)였다. 상경 계급이 많은 이유는 부대 업무의 중추로서 업무에 대한 책임도가 가장 크기 때문인데, 이경의 경우 부대 차원의 '신임 대원 부대 적응기'라는 교육 등의 지도적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타와 가혹행위가 많은 것은 그러한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부대별로 보면 거의 매일 혹은 적어도 1주에 1회 구타당한다는 경우가 총 66명인데, 이 가운데 전경대근무자 16.6%(11명), 기동대근무자 75.7%(50명), 방순대근무자 22.7%(15명)였다. 즉 기동대 근무자들의 구타경험이 타 부대보다 많게 나타났다.

(3) 가혹행위 당한 회수

아래의 표는 가혹행위를 당한 회수를 조사한 내용이다.

아래의 표를 보면 거의 매일 혹은 적어도 1주일에 1회는 정신적 가혹행위를 당하는 경우가 7.9%(105명)였다. 또한 2-3주에 1회가 1.7%(22명), 1개월에 1회가 1.0%(13명) 2-3개월에 1회가 1.2%(16명), 4개월 이상에 1회가 2.1%(28명)였다.

<표3-11> 가혹행위 당한 회수

		전혀 없다	거의 매일	1주에 1회	2-3주에 1회	1개월에 1회	2-3개월 에 1회	4개월 이상에 1회	합계
정신 적 가혹	빈도	1143	50	55	22	13	16	28	1327
	비율	86.1	3.8	4.1	1.7	1.0	1.2	2.1	100.0
육체 적 가혹	빈도	1126	22	50	17	14	27	40	1296
	비율	86.9	1.7	3.9	1.3	1.1	2.1	3.1	100.0

계급별로 보면 거의 매일 혹은 1주에 1회 정신적 가혹행위를 당한다는 경우가 총 103명인데, 이 가운데 이경 23.3%(24명), 일경 20.3%(21명), 상경 37.8%(39명), 수경 18.4%(19명)였다.

부대별로 보면 거의 매일 혹은 적어도 1주에 1회 정신적 가혹행위를 당한다는 경우가 총 105명인데, 이 가운데 전경대근무자 15.2%(16명), 기동대근무자 60.9%(64명), 방순대근무자 23.8%(25명)였다.

또한 육체적 가혹행위를 거의 매일 혹은 적어도 1주일 1회 당하는 경우는 5.6%(72명)였다. 또한 2-3주에 1회가 1.3%(17명), 1개월에 1회가 1.1%(14명) 2-3개월에 1회가 2.1%(27명), 4개월 이상에 1회가 3.1%(40명)였다.

계급별로 보면 거의 매일 혹은 1주에 1회 육체적 가혹행위를 당한다는 경우가 총 77명인데, 이 가운데 이경 23.3%(18명), 일경 16.8%(13명), 상경 29.8%(23명), 수경 23.3%(18명)였다.

부대별로 보면 거의 매일 혹은 적어도 1주에 1회 육체적 가혹행위를 당한다는 경우가 총 77명인데, 이 가운데 전경대근무자 16.8%(13명), 기동대근무자 61.03%(47명), 방순대근무자 15.5%(12명)였다.

(4) 구타 및 가혹 행위 유형

아래의 표는 구타 및 가혹행위의 유형에 대한 조사이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속부대에서 행해지는 구타는 총 395명 중 40.4%인 160명이 출동버스 속 구타, 즉 출동버스 속에서 앉은 채로 두 다리 들게 하거나 주먹으로 머리 때리며, 버스 속 천정의 봉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차거나 밟는 행위를 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무릎을 꿇려 앉혀놓고 머리를 차고 짓밟는 행위가 16.7%인 66명, 식판던지기 11.6% 26명, 기울경 구타 10.6%(24명), 진압봉 구타 6.8%(27명), 취침시간 대 기간요원의 눈을 피해 조를 짜서 릴레이식으로 하급기수를 때리는 릴레이식 구타가 6.1%(24명) 행해지며, 기타가 7.8%(31명)였다.

또한 가혹행위의 경우 선임고참이 상급고참에게 지적받을 때는 고개숙이고 있게 하거나 선임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곳만 바라보게 하는 ‘부동자세 세우기’가 총 1069명 중 36.4%인 389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금품이나 보급품 빼앗기 13.7%(146명),

물 안 먹이기 11.1%(119명), 불침번 등 야간 근무시 하급기수를 취약시간대(02:00~04:00)에 배정하고 교대를 늦게 하거나 안 해주는 근무전가행위 10.1%(108명), 보행시 벽에 붙어 다니게 하거나 팔을 붙여 다니게 하는 경우가 10.0%(107명), 침상에 누워 다리와 고개를 들고 있게 하기 8.1%(87명), 또한 출동버스 속에서 엉덩이를 들고 무릎을 구부리고 있게 하는 일명 ‘오토바이자세’가 7.7%(83명)였다. 더구나 최근 언론의 이슈가 된 ‘알몸신고식’도 2.9%(30명)나 있다고 조사되었다. 그밖에도 단체머리박기와 단체기합 13.37%(143명), “눈깔을 파버린다”, “대가리를 갈아 마신다” 등 심한 욕설과 폭언행위 13.18%(141명), 잠 안 채우고 암기강요 6.36%(68명), 붕끼고 오리걸음 2.99%(32명), 훈련 중 기간요원이 못 본 척하는 상황에서 훈련을 빙자한 기합 등 사적 제재행위 4.67%(50명), 음식점이나 휴게실에서 음식값을 하급기수에게 내게 하는 사적 부담행위 4.67%(50명), 하급기수가 귀대 시 좋은 옷을 입고 오면 빌려 외박 나가 집에 벗어놓고 와서 돌려주지 않거나 귀대 시 물품반입을 강요하는 등 물품착취가 4.39%(47명), 겨울에 팬티차림으로 찬물 속에 들어가게 하기 2.24%(24명), 세면장에서 푸샵시키기 2.61%(28명) 등의 가혹행위들이 조사되었다.

<표3-12>구타 및 가혹 행위 유형

구타행위 유형			가혹행위 유형		
유형	빈도	비율	유형	빈도	비율
발로 짓밟기	66	16.7	알몸 신고식	30	2.9
식판 던지기	46	11.6	고개 숙이고 부동자세	389	36.4
릴레이식 구타	24	6.1	침상에서 다리 들기	87	8.1
진압봉 구타	27	6.8	근무전가행위	108	10.1
기울경 구타	41	10.6	오토바이자세	83	7.7
출동버스 속 구타	160	40.4	금품·보급품 빼앗기	146	13.7
기타	31	7.8	물 안 먹이기	119	11.1
계	395	100	벽 붙어 다니기	107	10.0
			계	1,069	100

(5)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하는 이유

아래 표는 구타를 당한 이유를 순위별로 조사한 내용이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타를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22.9%(113명)가 선임대원 지시불이행을 21.1%(104명)가 군기(기강확립)을, 19.2%(95명)는 시위진압작전의 효율성을 들었다.

계급별로 분석하면 선임대원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든 경우는 전체 110명 중 이경 18.2(20명), 일경 20.0%(22명), 상경 31.8%(35명), 수경 30.0%(33명)였다. 또한 군기확립을 이유로 든 경우는 전체 104명 이경 22.1(23명), 일경 32.7%(34명), 상경 26.9%(28명), 수경 18.3%(19명)였다. 이들을 부대별로 보면 선임대원의 지시불이행의 경우는 총 112명 중 전경대 30.4%(34명), 기동대 36.6%(41명), 방순대 33.0%(37명)였고, 군기강확립의

경우는 총 104명 중 전경대 15.4%(16명), 기동대 52.9%(55명), 방순대 31.7%(33명)였다.

<표 3-13>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하는 이유

	1순위		2순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신임대원 지시 불이행	113	22.9	84	18.5
청소미비 등 내부생활 불량	44	8.9	61	13.4
암기사항 미숙지	23	4.7	33	7.3
기간요원의 지적(질타)	43	8.7	47	10.3
군기(기강확립)을 이유로	104	21.1	92	20.2
맞아야 말 잘 듣는다는 신임대원의 인식	45	9.1	37	8.1
시위진압작전의 효율성 위해	95	19.2	55	12.1
죽구 등 전투체육 패전을 이유로	0	0.0	6	1.3
직원의 무심결에 한 농담이나 실언으로	6	1.2	29	6.4
특별한 이유 없이	11	2.2	6	1.3
기 타	10	2.0	5	1.1
합계	494	100.0	455	100.0

(6) 구타·가혹행위 당할 당시의 계급

아래의 표는 구타 및 가혹 행위를 당할 당시의 계급을 조사한 자료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할 당시의 계급은 이경이 전체 계급중 68.7%에 해당되는데, 특히 신임대원 100일 특별 적응기간이라는 부대내 대책이 무색할 정도로 전입 후 3개월 까지 기간의 이경이 상당히 많았다. 다음은 일경으로서 83명당(24.0%), 상경이 20명(5.8%), 수경이 5명(1.4%)로서 계급이 낮을수록 구타 및 가혹행위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3-14> 구타·가혹행위 당할 당시의 계급

	이경 (3개월까지)	이경 (4-5개월)	일경 (3개월까지)	일경 (4-6개월)	상경	수경	합계
빈도	164	73	47	36	20	5	345
비율	47.5	21.2	13.6	10.4	5.8	1.4	100.0

신임 대원인 이경의 부대 적응을 위해 실시중인 ‘신임대원 부대적응’이라는 제도가 무의미 할 정도로 신임 이경의 구타가 가장 많았다.

(7) 구타·가혹행위 발생시간

아래의 표는 구타 및 가혹 행위 발생시간을 조사한 자료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시간은 일석점호 전후가 가장 많은 128명(35.2%)이 응답했으며, 두 번째는 시위진압대기중 72명(19.8%)이었으며, 출동전후

56명(15.4%)로 나타났다. 출동도 시위도 근무의 개념이므로 출동과 시위 관련등의 근무를 하나로 분석한다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통계치가 나온다. 다음으로는 일조점후 전후로서 42명(11.5%), 휴게시간중이 39명(10.7%), 근무 중에 14명(3.8%), 식사 전후 7명(1.9%), 취침 중이 6명(1.6%)로 조사되었다.

<표3-15> 구타·가혹행위 발생시간

	발생시간 1순위		발생시간 2순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일조점후 전후	42	11.5	34	10.3
근무 중	14	3.8	14	4.2
식사 전후	7	1.9	17	5.2
일석점후 전후	128	35.2	71	21.5
출동 전후	56	15.4	94	28.5
시위진압대기 중	72	19.8	53	16.1
휴게(자유)시간 중	39	10.7	39	11.8
취침 중	6	1.6	8	2.4
합계	364	100.0	330	100.0

계급별 유형을 보면 1순위인 일석점후 전후의 경우 이경이 17명으로서 13.4%, 일경이 27명인 21.3%, 상경이 48명인 37.8%, 수경이 35명인 27.6%이었으며, 휴게시간의 중으로 응답한 경우 이경이 16명인 41.0%, 일경이 11명인 28.2%, 상경은 8명인 20.5%, 수경은 4명인 10.3% 이었다.

부대별 유형을 보면 일석점후 전후의 경우 전경대가 33명인 26.0%, 기동대가 54명이 응답하여 42.5%, 방순대의 경우 40명인 응답한 31.5% 이었으며, 시위진압대기중의 경우 전경대는 16명이 응답하여 22.2%, 기동대는 40명인 응답하여 55.6%, 방순대의 경우 16명인 22.2%로 조사되었다.

시위·진압 현장에서의 구타·가혹 행위는 허용된다는 의식과 구타·가혹 행위가 없으면 임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시위·진압 중에 구타·가혹 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일석 점후 이후에 구타·가혹 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업무가 종료된 상황으로 기간요원 등 지휘관들의 통제가 느슨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8) 구타·가혹행위 발생장소

아래의 표는 구타 및 가혹 행위 발생장소에 대한 조사자료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장소는 105명(31.1%)가 응답한 내무반이 가장 많았으며, 출동버스가 97명(28.7%), 화장실이 27명(8.0%), 식당주변 26명(7.7%), 체력단련실이 13명(3.8%), 소각장이 11명(3.3%), 세면장과 사무실이 9명(2.7%), 보일러실이 1명(3%)로 나타났다.

계급별 유형을 보면 내무반의 경우 이경은 25명(21.0%), 일경의 경우 16명(15.2%), 상경의 경우 42명(40.0%), 수경의 경우 25명(25.8%)로 조사되었다 . 또한 출동버스 내

라는 응답중 이경의 경우 14명(14.6%), 일경의 경우 21명(21.9%), 상경은 38명(39.6%), 수경의 경우 23명(24.0%)로 나타났다.

<표3-16> 구타·가혹행위 발생장소

	발생장소 1순위		발생장소 2순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식당 주변	26	7.7	14	4.6
사무실	9	2.7	8	2.6
내무반	105	31.1	70	23.0
화장실	27	8.0	30	9.8
훈련장	19	5.6	39	12.8
출동버스	97	28.7	85	27.9
소각장	11	3.3	20	6.6
세면장	9	2.7	18	5.9
체력단련실	13	3.8	11	3.6
보일러실	1	.3	3	1.0
기타	21	6.2	7	2.3
합계	338	100.0	305	100.0

부대유형별로 내무반의 경우 전경대는 25명(24.0%), 기동대는 59명(56.7%), 방순대는 20명(19.2%)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출동버스내의 경우 전경대는 16명(16.5%), 기동대는 43명(44.3%), 방순대는 38명(39.2%)로 나타났다.

내무반에서 구타·가혹행위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간요원들이 상주하고 있다고는 하나 24시간 감시와 통제가 가능한 것이 아니며,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못하여 오는 대인간 스트레스로 인하여 갈등이 빚어져 폭력 등의 구타·가혹행위로 표출되기 때문이다. 또한 시위·진압 현장에서 미온적 태도를 보인 대원들을 지목하였다가 상황 종료 후 복귀하는 버스 내에서 진압봉으로 폭행, 좌석에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 구타·가혹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지휘관들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소각장, 화장실 등에서 구타·가혹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9) 구타에 이용되는 도구

<표3-17> 구타에 이용되는 도구

		손, 발 등 신체	시위진압 도구	청소용 도구	부삽	각목	기타	합계
구타 도구 1순위	빈도	248	19	9	5	0	15	296
	비율	83.8	6.4	3.0	1.7	0.0	5.1	100.0
구타 도구 2순위	빈도	105	68	74	7	5	20	279
	비율	37.6	24.4	26.5	2.5	1.8	7.2	100.0

위의 표는 구타에 이용되는 도구를 조사한 자료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타에 이용되는 도구로서 손, 발 등 신체로 직접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248명(83.8%)이 응답하였다. 다음은 19명(6.4%) 시위진압용 도구가 이용되며, 청소용도구와 부삽이 각각 9명(3.0%), 5명(1.7%)으로 조사되었다.

(10) 구타·가혹행위 목격시 대처행동

아래의 표는 구타 및 가혹 행위를 당하거나 목격시의 조치사항을 조사한 자료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거나 목격시의 조치사항 중 못 본척 참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24%로서 199명이 있었으며, 친구나 동기에게 알렸다는 59명(7.1%), 직속상관에 보고 했다 30명(3.6%),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는 7명(0.8%), 소원수리 작성 6명(0.7%), 부모나 친지에게 알렸다 3명(0.4%)로 응답을 했다.

<표3-18> 구타·가혹행위 당하거나 목격시의 조치

	당하거나 목격한 적 없음	직속상관 에 보고	소원수리 작성	친구나 동기에게 알림	부모/친 지에게 알림	인터넷에 올림	못 본 척 참음	기타	합계
빈도	515	30	6	59	3	7	199	10	829
비율	62.1	3.6	0.7	7.1	0.4	0.8	24.0	1.2	100.0

계급별 유형을 보면 구타 및 가혹 행위를 당하거나 목격했다라는 응답에 대해 이경의 경우 못본척 참았다 67.2%, 직속상관에게 보고, 친구와 동기에게 알렸다가 각각 13.1% 순이었다. 이외에 소원수리, 인터넷에 글 올리기, 부모 친지에게 알렸으며, 마찬가지로 일경, 상경, 수경의 경우에도 못 본척 참았다, 직속상관에게 보고, 친구와 동기에게 알림, 소원수리, 인터넷에 글 올리기, 부모·친지에게 알렸다는 순이었다.

부대유형별로 구타 및 가혹 행위를 당했거나 목격했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조사내용을 보면 진경대의 경우 못 본척 참았다가 52명인 83.8%로 가장 많았고, 친구에게 알림, 직속상관에게 보고했다라는 응답순이었다. 마찬가지로 기동대와 방순대의 경우도 못 본 척 참았다가 가장 많았으며, 친구에게 알림, 직속상관에게 알린다, 소원수리, 인터넷에 글 올리기, 부모·친지에게 알린다는 순이었다.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거나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묵인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이유는 신고 등으로 인해 본인에게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고하더라도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해준다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낮은 것은 인터넷 설치의 미흡과 프라이버시가 보장 될 정도의 시설물의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11) 구타·가혹행위 발생시 상담대상

아래의 표는 구타 및 가혹 행위 발생시 상담대상을 조사한 자료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시 상담대상으로는 입대 동기가 55.4%로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소대장은 15.6% 분대장은 13.1%로서 부대내에서 같이 생활하는 대원과 간부를 위주로 상담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친구와 애인에게 상담한다는 경우 11.1%였으며 가족과 친지에게 상담하는 경우는 3.0% 순이었다. 특히, 부대내의 최고 지휘관인 부대장과는 1.8%로서 가장 낮은 상담대상으로 조사되었다.

<표3-19> 구타·가혹행위 발생시의 상담대상

	분대장	소대장	부대장	동기	가족/친지	친구/애인	합계
빈도	52	62	7	220	12	44	397
비율	13.1	15.6	1.8	55.4	3.0	11.1	100.0

계급별 구타 및 가혹 행위 발생 시 상담대상을 보면 부대 동기에게 한다가 가장 많았다. 이경의 경우 분대장과의 상담이 20.0%, 친구/애인이 9.4%, 소대장 9.4%, 가족 8.2%, 부대장 3.5% 순이었다. 일경의 경우 친구/애인이 18.4%, 소대장이 14.4%, 분대장 9.2% 순이었으며, 상경의 경우 소대장 19.1%, 친구/애인 11.7%, 분대장 9.5%, 부대장 2.9%, 가족/친지는 2.2%순이었다. 수경의 경우 소대장이 18.0%, 분대장 14.8%, 친구/애인이 5.3%, 가족이 2.1% 순이었으며, 부대장과 가족/친지에게 상담을 하는 경우가 가장 낮았다.

이경의 경우 구타·가혹 행위 발생 시 동기와 상담을 가장 많이 하는 이유는 본인과 처해 있는 상황이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며, 선임대원일수록 기간 요원 내지는 지휘관들과 상담을 많이 했는데 후임대원들보다는 근무기간이 오래되어 친화도가 있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부대 내의 최고 지휘관과의 상담이 가장 낮는데 인권 등의 교육을 통하여 부대원들과 친밀해 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12) 구타·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아래의 표는 구타 및 가혹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조사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의경의 인권의식 미흡이 40.0%로서 177명이 응답했으며, 열악한 근무환경을 114명(25.8%)로 응답하였다. 지휘관과 기간요원의 관심부족으로서 각각 51명(11.5%)와 47명(10.6%), 당직 근무자의 근무소홀로서 8명(1.8%)로 부대내 간부들의 대원들에 대한 무관심에 대한 응답 또한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3-20> 구타·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전·의경의 인권의식 미흡	기간요원 관심부족	열악한 근무환경	당직근무자 근무소홀	지휘관의 관심도 부족	기타	합계
빈도	177	47	114	8	51	45	442
비율	40.0	10.6	25.8	1.8	11.5	10.2	100.0

계급별로 이경, 일경, 상경의 경우 전의경의 인권의식 미흡을 가장 큰 이유로 각각 54.1%, 57.1%, 41.6%로 응답하였으며, 수경의 경우 열악한 근무환경을 51.1%로 1순위로 응답하였다. 그 밖에 이경, 일경, 상경의 경우 2순위로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적하였는데 각각 18.8%, 19.0%, 25.8% 이었고, 수경의 경우 27.3%가 전의경 인권의식미흡을 지적했다. 외에 기간요원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심부족을 그 이유로 글었다.

부대유형별에 있어서 전경대의 경우 48%가 전·의경의 인권의식 미흡을 29.0%가 열악한 근무환경을 나머지 23%는 지휘관들의 관심부족을 들었으며, 기동대의 경우 전·의경 인권의식 미흡을 43.4%, 열악한 근무환경을 27.1%, 지휘관의 관심을 29.5%, 방순대의 경우 전의경인권의식미흡을 42.3%, 열악한 근무환경을 31.3%, 지휘관의 관심 부족을 26.4%로 지적하였다.

전·의경의 구타·가혹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인권의식 미흡인 ‘맞아야 말을 잘 듣는다’, ‘구타·가혹 행위가 있어야 부대가 돌아간다’ 라는 잘못된 고쳐지지 않는 인식에 주된 이유가 있으며, 개인의 사생활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대인과의 갈등과 스트레스로 인해 구타·가혹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지휘관과 기간요원들이 인권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구타·가혹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을 볼 때 그런 교육은 형식적 교육에 그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 특히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만이라도 아무 일 없길 바라는 무사안일주의는 구타·가혹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이며, 기간요원의 잦은 교체로 인하여 구타·가혹 행위 근절에 대한 정책이 지속성 없이 단절되는 것도 이유이다.

4. 전·의경 복무환경의 문제점과 정책적 제언

1) 전·의경 복무환경의 문제점

일반사회조직의 인권상황 진단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게재할 수 있듯이, 전·의경의 인권상황을 진단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이는 일반조직과는 달리 더 많은 제약과 임무의 특수성을 띄는 전·의경조직이므로 당연한 느낌마저 든다. 대간첩작전의 일환인 해안/도서 지역의 경계경비나 다중의 집회와 시위에 대한 대처라는 특수한 임무의 수행에는 일반사회조직이 갖는 임무수행과는 분명 다른 특수성이 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의경에게는 일반사회조직원과는 다른 관리나 통제방식이 요구되고 행해지리라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통제나 관리방식은 엄격한 법치주의의 제약하에 있어야 하고 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고 봐야 한다. 특수한 임무를 띄고 특수한 조직환경에 놓였다고 해도 전·의경은 분명 인간이고 국민의 한 사람임은 변함없다. 결국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보장을 받고 있는 지가 인권상황의 진단에 기본적 잣대가 될 것이며, 보다 구체적으로 구타나 가혹 행위, 근무여건, 내무생활, 편의시설, 복지혜택, 부대관리, 인권교육 및 의식 차원에서

전·의경의 인권상황을 진단하고자 한다.

(1)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의 상존

구타 및 가혹행위는 대표적인 인권침해의 예임을 누구나 공감한다. 경찰당국의 입장에서 구타나 가혹행위가 발생하여 대원이 자살하거나 탈영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곤혹스러워하며 각종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우선 경찰청훈령 ‘전투경찰순경등 관리규칙’, 경찰청 예규 ‘전경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규칙’, 경찰청 예규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등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의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정훈교육, 지휘감독강화, 대원관리철저, 화목한 부대분위기조성 등을 통한 사고예방 일반지침을 시달하는가 하면 구타, 자살, 자해, 대민, 교통, 총기 및 안전 사고 등 유형별 사고예방지침도 시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규정이나 시달들이 지켜지지 않는 데 있다.

전·의경 부대의 구타나 가혹행위가 빈발하며 그 피해또한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즉, 부대 생활 중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한 전·의경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2.4%였다. 또한 구타를 당한 회수를 조사한 결과 14.3%인 169명의 경험자 중에서, ‘거의 매일’ 혹은 ‘적어도 1주일에 1회’는 구타를 당한다는 응답자가 66명(5.6%)이었다. 정신적 가혹행위의 경우 응답자 1327명 중 거의 매일 혹은 적어도 1주일에 1회는 정신적 가혹행위를 당하는 경우가 7.9%인 105명이었다. 육체적 가혹행위의 경우 응답자 1296명 중 거의 매일 혹은 적어도 1주일에 1회 당하는 경우는 5.6%인 72명이었다. 정신적 가혹행위와 육체적 가혹행위를 비교할 때 2.3%가량 정신적 가혹행위가 많았는데, 이는 가혹행위는 주로 정신적으로 행하며 육체적 가혹행위는 구타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할 당시의 계급을 조사한 결과 이경이 전체 계급중 68.7%(전체 345명 중 237명)였다. 이는 신입대원 100일 특별 적응기간이라는 부대내 대책이 무색할 정도로 전입 후 3개월까지의 이경이 응답자의 47.5%인 164명으로 상당히 많았다. 다음은 일경으로서 83명당(24.0%), 상경이 20명(5.8%), 수경이 5명(1.4%)으로써 계급이 낮을 수록 구타 및 가혹행위를 많이 당함을 알 수 있었다.

발생기간의 경우는 ‘일식점호나 일조점호’가 응답자 364명 중 46.7%인 170명으로 가장 많고, ‘시위진압 대기 중 혹은 출동전후’가 39.0%인 142명, ‘휴게시간이나 취침 중 혹은 심지어 식사전후’가 14.2%인 52명이었다. 구타에 이용되는 도구의 경우 ‘손/발 등 신체’가 응답자 296명 중 83.8%인 24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위진압용 도구’가 6.4%, ‘청소용도구와 부삽’이 각각 3.0%, 1.7%였다.

이러한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했을 때의 심정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폭행하고 싶었다’거나 ‘가해자를 죽이고 싶었다’ 등 가해자에 대한 응징 내지 보복하려는 심정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복무이탈이나, 자살 및 자해의 심정도 조사되었다. 결국 구타나 가혹행위는 대원들의 복무이탈이나 자살 및 자해 등의 제2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

에 그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열악한 근무여건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입비준시 최우선조건으로 하는 8개 기본협약사항 중 전쟁시 강제노동을 제외하고는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에 위반하는 사항으로 병역법에 의한 공익요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한 전투경찰을 들고 있다.²⁶⁾ 즉 전·의경은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병역의무이외의 치안행정에 강제 동원되는 ‘강제노동자’라는 입장이다. 강제노동이라는 오명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준하는 근로조건과 임금의 지급이 있어야 하지만, 군인신분에 준하는 보수만이 지급되는 실정이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당 40시간, 1일당 8시간 초과근무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4시간 당 30분 이상, 8시간 당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전·의경의 경우는 야간 불침번을 제외하면 공휴일과 1일 8시간복무가 보장되는 군인보다도 열악한 근무여건에 놓여있다. 이하에서는 근무여건과 관련된 복무생활 불만족 요인, 하루평균 근무/휴게/수면시간과 그 만족도, 야간근무회수, 출동회수와 출동에 따른 부상회수, 부상 후 치료 및 휴식보장, 부대정비의 날의 보장정도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① 과다한 근무시간

전·의경은 전체적으로 과다한 근무시간과 부족한 휴게·수면시간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다.

근무시간의 경우, 하루평균 7-8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 1108명 중 50.3%인 557명이지만 11-12시간을 근무한다는 응답도 24.9% 276명이었고, 심지어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대원도 1.1%인 15명이나 되었다. 즉 9시간 이상 과다 근무하는 대원들이 조사대원 1108명 중 35% 38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근무시간은 똑같이 의무 복무하는 군과 비교할 때 과다함을 알 수 있었다.

휴게시간의 경우, 휴게 시간이 ‘전혀 없다’가 1.6%(21명), ‘1시간 미만’인 경우가 11.8%(151명)이고 ‘1-2시간’인 경우가 28.4%(364명)으로 총 응답자 1282명 중에 41.8%인 536명이 2시간 미만의 휴게/자유시간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수면시간의 경우, 수면시간이 5시간 미만이라는 응답도 6.3%(79명)이고 5-7시간의 수면시간을 갖는 경우가 조사대상 1254명 중 54.7%(686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전·의경의 수면시간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근무/휴게/수면시간들에 대한 만족 정도로, ‘매우 불만이다’, ‘불만이다’, ‘그저 그렇다’가 각각 62명(4.7%), 143명(10.9%),

26) 허창영, “위헌논란, 강제노동 전·의경제 폐지해야”, 제4차 경찰개혁 연속 정책토론회, 토론집, 2005, pp. 66-67.

② 야간근무와 잦은 출동

전·의경 근무의 특성 상 야간근무나 집회/시위 진압 등을 위한 출동 및 출동에 따른 부상 및 그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우선 ‘한 달 평균 야간근무회수’는 응답자 1274명 중 거의 대부분(83.2%인 1060명)이 3회 이상이었으며 15회 이상도 21.5%인 274명이나 되었다. 한편 ‘한 달 평균출동회수’도 3회 미만인 경우는 11.1%에 그쳤고 4일에 1회 꼴인 7회 이상이 대부분인 68%였고 심지어 2일에 1회 이상인 15회 이상도 19.1%나 되었다. 출동 시에는 야간근무가 동반되며 수면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출동 후 부상당한 경우가 전체 1277명 중 19.9%인 257명이었는데, 부상 후 치료 또는 휴식보장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거나 보장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총 응답자 1085명 중 18.1%인 197명이었다.

③ 과중한 업무량과 부족한 인력

근무여건의 열악성은 우선 복무생활불만족 원인을 조사하면 쉽게 파악된다고 하겠다. 전체 943명의 응답자 중에서 복무생활불만족 원인으로 ‘집회/시위의 진압 등 업무가 힘들기 때문’이 47.4% 447명으로 가장 많고, ‘휴게 및 자유시간의 부족’이 13.1% 175명으로 다음이며, ‘사역의 과다’가 7.4% 70명이었다. 즉 응답자의 약 68%가량이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불만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과중한 업무량에 비해 조사 대상부대들의 현재인원은 정원에 크게 못 미치고 있었다.(전경대 평균 34명 부족, 기동대와 방순대 19-20명 정도 부족)

이러한 대원의 부족은 업무의 연속성에도 장애가 되지만 근무 및 휴식시간의 보장을 어렵게 하고, 휴가 및 외출외박 등에도 영향을 미쳐 전반적으로 전·의경의 근무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결국 과다한 근무시간 및 예측할 수 없는 출동 등의 과다 및 부상의 위험성에 따른 부상과 그 치료 및 휴식보장의 불충분 등이 전·의경의 근무관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④ 구타 및 가혹행위자에 대한 미온적 처리

구타나 가혹행위의 경우 우선 그 행위자가 문제이지만 행위자에 대한 불충분한 처리도 문제이다. 즉 경찰청에서 제시한 구타 및 가혹행위 건수와 행위자의 처리현황을 보면 구속되어 형사처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군인의 경우 구타 및 가혹행위자들 대부분이 형사 처벌받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즉 구타나 가혹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부대차원의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하여 응답자 중 25.6%인 85명은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대원들 대부분은 즉 약86%가량은 구타나 가혹행위를 목격했을 때에도 ‘못 본 척 참았거나’(304명 중 가장 많은 65.5%로써 199명임), ‘친구나 동기 또는 부모친지에게 알렸지’(20.4%인 62명), 소원수리 하거나 직속상관에 보고한 경우는 11.8%인 36명에 불과하였다.

2) 정책적 제언

(1) 전·의경 인권보호법(안)의 제정

① 취지

가. 전투경찰대설치법상의 벌칙조항에 대한 보완필요

현재 전·의경의 복무와 관련된 법규에는 전투경찰대설치법,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기동대관리규칙, 방범순찰대관리규칙 등이 있으나, 이들 내용에 인사 및 복무규율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의 처리절차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1982년 12월 31일에 개정된 전투경찰대설치법 제9조 내지 제10조에 벌칙조항을 삽입하여 복무이탈자의 처벌, 명령위반자, 상관폭행자, 상관면전모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으나 이는 부대지휘권 확립을 위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전·의경 상호간의 폭행 및 가혹행위, 성폭력 등에 대한 처벌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²⁷⁾. 또 동법 제11조에는 위의 법제9조 내지 제10조의 위반행위도 지휘관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조항만 보아도 지휘권 확립차원의 내용이지 대원 상호 간에 발행하는 구타 등 인권침해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군조직에는 강력한 지휘권의 확립과 병상호 간에 발생하는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군무이탈죄, 근무태만죄, 항명죄, 폭행·협박·상해죄, 추행의 죄 등에 대하여 일반형법에 우선하는 특별형법이 운용되고 있으나 전·의경의 경우에는 특별형법의 제정 없이 일반형법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현행 전투경찰대설치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현실을 감안하면 동법의 보완보다는 새로운 특별법의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처벌의 위화효과의 제고필요

현실적으로 보면 전·의경의 처벌도 엄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2004년도를 기준으로 구타로 적발된 건수는 총 156건으로 이중 형사입건된 건수는 불과 6건(구속1건, 불구속5건)으로 형사입건율은 0.4%에 불과하다. 복무이탈의 경우는 전체 92건 중 형사입건은 23건(구속15건, 불구속8건)으로 형사입건율은 25%였으며, 부대 내 성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은 전무한 것으로 보아²⁸⁾ 법규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한 형벌의 특별예방과 일반예방효과가 극히 미흡한 실정인바 새로운 처벌법규의 제정과 엄정한 처벌을 통한 부대내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예방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27) 전경구타및가혹행위근절규칙(1993.9.1제정, 경찰청예규제109호)에 의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구타 및 가혹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미약한 실정이다.

28) 국정감사자료(박찬숙의원 요구자료)에 의하면 2001년에 1건이 있었으나 2002년, 2003년, 2004년 7월현재 한건도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일반적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경찰당국은 전·의경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들어, 부대정비의 날이 있으나 실질적인 휴식의 보장이 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근무시간의 과다로 인한 피로누적 등 근로시간에 대한 보장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외에도 부상자에 대한 의료혜택의 미비, 내무환경의 열악 등 전·의경의 일반적인 인권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외에도 전·의경 징계의 종류 중 영창제도²⁹⁾에 의한 인신구속의 인권침해가능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인권보호대책의 강구도 필요하다. 이에 전·의경의 인권보호를 위한 선언적·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인권보호법(안)의 제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② 전·의경 인권보호법(안)의 기본방향과 기대효과

가. 기본방향과 내용

법안의 기본방향은 전·의경의 복무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적 상황에 따른 인권보호방안이 전반적으로 포함하면서 구타 등 인권침해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인권의식함양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법안의 내용에는 인권침해행위를 한자에 대한 처벌조항(구타, 가혹행위, 성적 괴롭힘 등), 복무이탈자의 처벌조항(군대내 군무이탈자에 준하는 처벌수준), 전의경 범죄피해자의 보호, 피해사실 인지시 신고의무, 인권전담조직설치, 근무 및 휴식시간의 보장, 휴가, 외출, 외박 등에 대한 보장, 의료권의 보장, 내무생활에 필요한 기본환경 등 일반적인 인권보호에 필요한 조항과 경찰관리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여 제정한다.

나. 기대효과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통한 기대효과는 먼저, 가칭 전·의경 인권보호법의 제정은 전·의경의 인권보호의 당위성에 대한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형벌을 통한 일반예방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생활하고 있는 전·의경의 인권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2) 근무 및 휴식의 철저한 보장 : 주 40시간·교대근무제의 시행

① 취지

29)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제99조내지제110조 참조

현재 전·의경의 근무/휴게/수면시간 및 휴무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규화된 바 없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상 군인/군무원에 준하여 혹은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생각한다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그 준거 규정으로 볼 수 있다.³⁰⁾ 하지만, 내무생활이 강제된 전·의경에 대한 구체적인 근무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근무/휴게/수면시간 및 휴무일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 없이 근무를 강제하고 있다.

이 연구의 조사에 의하면, 하루 평균 '11-12시간'을 근무한다는 응답이 24.9%, 심지어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대원도 1.1%나 되었다. '9시간 이상' 과다 근무하는 대원들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원 1,108명 중 35%로 나타났다. 휴게시간의 경우, 총 응답자 1,282명 중에 41.8% 인 536명이 '2시간미만'의 휴게/자유시간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수면시간의 경우, 수면시간이 5시간 미만이라는 응답도 6.3%이고 5-7시간의 수면시간을 갖는 경우가 조사대상 1,254명 중 54.7%(68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과다한 근무시간과 휴게 및 수면시간의 부족현상은 똑같이 의무 복무하는 군과 비교할 때도 과다하다고 하겠다.

특히 군인의 경우 일요일은 물론 토요일 휴무제가 정착된데 반해 전·의경은 1주일에 1일 '부대정비의 날'이 휴무로 주어지지만 이마저도 출동 등의 이유로 연기되거나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번 조사결과 전·의경의 복무생활불만족요인으로 업무과다 및 휴게시간의 부족을 가장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근무시간을 줄여주고 충분한 휴식과 자유시간의 보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② 주40시간·교대근무제의 실시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전·의경을 국가공무원법상 군인/군무원에 준하여 혹은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생각한다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하여 주 40시간의 근무시간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출동시기나 규모 등을 예상할 수 없는 집회·시위의 특성상 명확한 근무시간이나 교대시간을 확정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발생한다. 사실상 전·의경을 공무원에 준하여 근무시간을 부여하지는 않는 현실이다. 철야근무는 물론 1주일에 하루 '부대정비의 날'로 휴무케 하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현실인 것이다. 특히 유사하게 의무복무에 종사는 군인의 경우 토요일 휴무까지 보장하고 1일 8시간 근무제가 정착된 것과 비교할 때도 전·의경의 열악한 현실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주40시간 근무제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보여 진다. 이러한 안은 이미 경찰청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우선 시위규모와 빈도, 발생시기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도구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의경으로 하여금 경비경찰업무를 계속하게 할 것이라면 부족한 대원들의 충원이 요구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시위 등 대원들의 출동이요구되는 상황에서 적정인원만 출동시키고 나머지 인원들

30)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하면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를 원칙으로 한다(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제1항).

에게는 공휴일/주말 등을 보장하거나 당시 출동할 수밖에 없는 대원들은 익일 혹은 출동 후에 충분한 휴식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치안행정의 일선을 담당하는 생활안전경찰활동이 종전의 전일제 내지 2교대제에서 3교대제가 가능했던 실례가 있기 때문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경비경찰은 생활안전경찰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 즉 교육훈련이나 부대내에서의 일상적인 업무이외의 실질적인 경비활동이 사전에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무유무하게 많은 경비인력이 요구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적정한 경비인력이 산출될 수 있다. 결국 같은 중대에서도 소대별 교대제로 휴무나 휴식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③ 전·의경 전문상담관제의 상설화

㉠ 취지

가. 전문상담·면담능력자의 필요

전·의경의 부대적응이나 근무 중의 애로사항 등의 처리를 위해 상담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에 의하면 관심요구 전·의경을 사전에 파악하여 특별관리 등 제반 사고요인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신상면담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³¹⁾ 1,2차 감독자는 월 2회, 3차감독자는 월 1회 신상면담 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상면담제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의문이다. 우선 일선에서 전·의경을 지켜보아온 직속상관인 기간요원이 상담·면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이 전문상담능력을 가지느냐가 문제이다. 또한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대원들의 입장을 얼마나 존중하느냐하는 자세 또한 문제이다. 결국 제3의 입장에 있으면서 대원들이 당한 부당한 대우나 애로사항들을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으로 상담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나. 정훈관의 역할을 포함한 새로운 상담관의 필요

전·의경의 각종 사고예방차원에서 전투경찰등관리규칙 제61조 이하에서 정훈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정훈교육은 충성심, 국가관, 경찰정신을 기르고, 건전한 인성 및 윤리교육 등으로 복무기강을 확립함과 동시에 전·의경의 자체사고 방지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정훈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정훈관을 두고 정훈관을 보조하기 위해 정훈경을 두고 있다. 또한 정훈관의 자질향상을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거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는 정훈관이 전문적인 상

31)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제73조 참조.

담·면담능력은 물론 인권교육능력을 갖지 못한다. 결국 기존의 정훈교육을 포함하여 전·의경의 인권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도록 전문능력을 갖춘 전문상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㉞ 전·의경 전문상담관제의 상설

가. 상담심리전문가의 상설화

모든 사고는 그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서 적합한 예방대책이 나올 수 있다. 철저한 원인분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인을 발견했어도 그 예방책을 모르거나 알아도 적용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일 것이다. 결국 수년간 각종 인권침해의 원인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신 청소년지도사, 상담·심리전문가, 기타사회교육가 등의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상담심리전문가를 상근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좋을 것 같다. 이러한 방법은 전·의경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할 수는 장점이 있다.

나. 경목 등 종교가의 상설(전·의경 조직에 군종장교제도의 적용)

위에서 지적한대로 현재 전·의경들은 종교활동이 거의 보장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신앙상담 등이 전무한 실정이다. 경찰위촉 목사·승려·신부운영규칙에 의해 경목 등을 위촉하고 경목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³²⁾ 전·의경조직에 활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군대는 군종장교를 두어 군의 종교집회나 병사들의 신앙 활동은 물론 신앙상담 및 인격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전·의경조직에서도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군의 군종장교제도와 유사한 가칭 ‘경종관(警宗官)제도’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국방부와 각종 종교단체와 협의하여 병역의무를 대신하여 전·의경 종교담당관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상근직전문가의 활용과 병행하여 지역사회의 전문가 집단과의 연계를 통하여 전·의경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정책들을 시행한다면 훨씬 많은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전·의경 어머니회 등과 같이 무보수 자원봉사자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정신병원 전문의, 심리상담전문가,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각종 경찰학과/범죄학과/청소년학과/심리학과 교수 및 전문가 등 지역사회 자원들을 시간급으로 주 1회 혹은 월 1회 part-time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32) 경찰위촉목사·승려·신부운영규칙 참조.

5. 결 론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제도로 운영되는 우리의 전·의경 제도는 그 존재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성문법규를 근거로 합헌성을 주장하는 가 하면 ILO기준을 들어 위헌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 보고서는 창설 당시의 목적에서 벗어나 치안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된 현실을 부정하고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조직 속에서 내무생활상, 업무수행상 겪게 되는 전·의경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전·의경제도의 폐지논란과는 별개로 현실적으로 전·의경의 인권침해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전·의경 대원의 구타 및 가혹행위, 그로 인한 복무이탈과 자살 사고의 발생, 알몸 사진의 인터넷유포, 각종 시위현장에서의 부상 등에서 보듯이 전·의경의 복무 중 사고는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사고는 군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고발생율에 견주어 결코 적지 않는 숫자라고 할 수 있다.

전·의경의 복무는 각종 시위진압작전에서의 투입, 야간방범순찰, 상황대기 등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군이 실전(實戰)없이 훈련 상황인 것에 비하면 전·의경의 상황은 급박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전·의경의 과중한 업무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 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결국 이러한 특수한 조직상황과 업무특성 등으로 전·의경은 구타·가혹행위 등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크고 이는 사람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살·복무이탈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전·의경조직의 인권상황에 대한 조사는 전무하다시피 하였다.

이 조사는 관련선행연구 및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하는 문헌조사와 전·의경 복무환경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주로 하였다. 설문은 ① 현재 전·의경의 불만요인, ② 전·의경의 근무관계와 내무생활 ③ 구타·가혹행위 등의 실태를 파악하는 내용으로 이루어 졌다.

이러한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진단하고 나름대로의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다만 이 조사는 현재 복무 중에 있는 전·의경대원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현재적인 실태를 조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조사대상이 복무 중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설문응답의 불성실과 왜곡의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전·의경 조직 같은 특수조직의 조사에는 관계기관의 자료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수차례에 걸친 연구진의 자료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된 자료가 전무하여 향후 개선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연구조사는 현재 복무중인 전·의경을 조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설문·방문조사차 방문한 부대의 부분적인 자료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연구의 한계를 지닌다.

참 고 문 헌

- 경기지방경찰청, “진압경비실무교재”, 경기도지방경찰청, 2002.
- 경찰사편찬위원회, 경찰50년사, 경찰청, 1995.
- 경찰청, 전경사고 예방점검 지침서, 서울: 경찰청, 1990.
- , 전경사고예방 : 자살과 자해(서울: 경찰청, 1999).
- , 경찰반세기 그격동의 현장, 서울 : 대한문화사, 2001
- ,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1995-2004.
- , 전경관리요령 -신지식 경찰관 육성-, 서울: 경찰청, 2000.
- 경찰종합학교, “경비실무”, 경찰종합학교, 2004.
- 고기환, “육군 폭행사건의 실태와 예방대책”,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2002).
- 국가인권위원회, “군내 구급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위한 기초 현황파악”, 국가인권위원회, 2002.
- 권봉주, “군 조사기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우리나라 육군헌병 조사기관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권지관, “경찰공무원의 근무형태와 사기에 관한 조사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길진환, “군 폭행사건의 원인분석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 김광재, “군 조직의 사기진작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김경래, “군 사고 예방을 위한 병사의 의식구조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김상균, “병영스트레스가 군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육군제3사관학교 충성대연구소, 2001.
- 김보환, “경찰인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기획예산처 연구보고서, 2001.
- 김일제, “군사고의 원인분석 및 그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 김진혁, “군 내에서 자살에 관한 연구”, 감리교신학대학 석사학위논문, 1999.
- 문만재, “군대내에서의 구타에 관한 인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박기배, “군조직의 민주화에 따른 효율적인 리더쉽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박경훈, “군 사고의 특성과 그 예방에 관한 연구-인간관계관리제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박광치, “전경의 사기 및 의식에 대한 실증적 연구 -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전경을 중심으로 -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박평환, “청소년비행에 따른 군범죄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서창원, “군 조직문화 재정립을 통한 군사고 예방 대책에 관한 연구 -군조직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서준구, “경찰 공무원의 사기 제고를 위한 조사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91.
- 손성환, "군범죄의 발생요인과 예방책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신동운 외, "인권구속제도를 둘러싼 법 적용의 왜곡과 그 해결방안",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법학 106('98.5) pp.17-59
- 신성원, "전·의경 사기 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 - 전북 지방경찰청 산하 전·의경을 중심으로 - " 원광재학교대학원논문집, 2004.
- 유명현,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 이경재, "경찰공무원의 사기 실태분석",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이계수, "한국의 군사법과 치안법:군사와 치안의 착종과 민군관계의 전도, 공법연구제31집 제4호, 2003.
- 이상호, "경찰관 사기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대학 치안연구소, 1995.
- 이철구, "전·의경 사기에 관한 실증적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임국민, "한국 경찰 공무원의 사기관리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장재혁, "경찰 공무원의 사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장태준, "군인의 자살사고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 전충현, "조직문화와 복지환경이 군인의 복무염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진준두, "육군의 폭행사고 실태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 채봉식, "군 조직내 병사들의 자살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허남식, "군 사고예방을 위한 자치관 역할에 관한 연구 ", 종합적 사고 관리모델을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홍두승, 한국군대의 사회학, 서울: 나남출판, 1996.

저자약력 : 저자 김상균은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서 박사학위(법학박사)를 취득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을 역임하고, 한국민간경비학회 총무이사, 한국범죄심리학회 편집위원, 한국공안행정학회 · 한국경찰학회 · 한국부패학회 등의 이사이며, 현재 백석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 범죄학, 경찰학, 부패학 등이다.

저자약력 : 저자 송병호는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서 박사학위(경찰학박사)를 취득했으며, 한국범죄심리학회 편집위원, 한국민간경비학회 · 한국공안행정학회 · 한국경찰학회 · 한국경찰발전연구회 등의 이사이며, 관심분야는 경찰학, 범죄학, 부패학 등이다.